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의 현황 평가와 차세대 전략 모색

윤석진 |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이정영 |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유광민 |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문재철 | 경제산업연구부 전임연구원



배경과 목적

- 2018~2019년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전략을 수립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탄소중립·AI 전환 등 산업 환경이 변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시급함
- 본 연구는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와 타 지역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차세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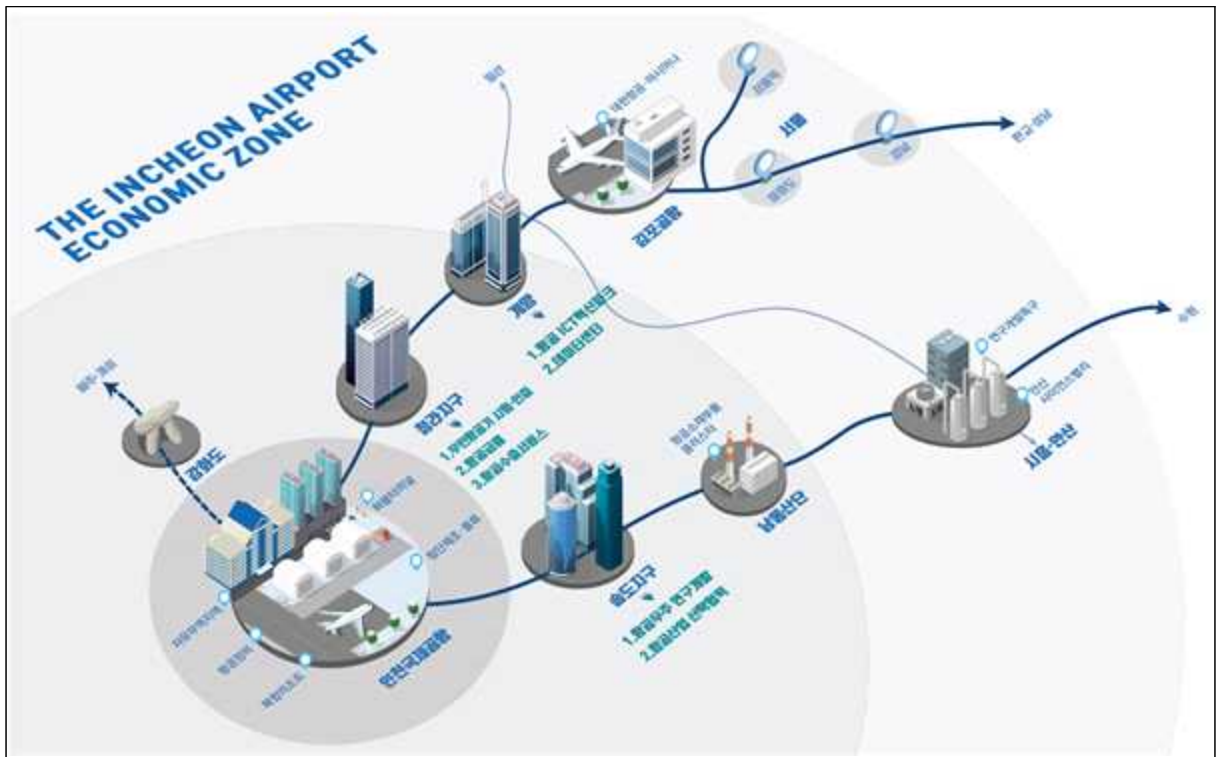
- 인천시는 변화된 산업적 환경에 대응하고 공항경제권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공항경제권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공항경제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준비해야 함
- 인천시는 공항경제권 관련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조율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조례 등으로 제도화하여 공항경제권 거버넌스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함
- 인천의 지역적 강점과 인천국제공항의 특성에 맞는 공항경제권 산업에 대한 선택적 집중 육성과 함께, AI·UAM 등 새로운 유망 분야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1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상의 개요

■ 공항경제권의 개념

- 2017년 국토교통부는 공항에 대한 관점을 여객 중심에서 산업 생태계와 시너지 효과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항경제권’ 개념을 도입. 공항시설 건설에 국한된 관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생태계 등이 공항 중심으로 집적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공항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국토교통부, 2017)
-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공항경제권을 “공항 인프라를 활용한 연결성과 접근성을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의 집적을 유도함으로써 공항과 지역경제 간의 성장 시너지 효과가 확보 가능한 공간”으로 정의
 -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전략을 구상

[그림 1]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개념도



자료 : 윤석진 외(2018)

■ 공항경제권의 공간적·산업적 범위

- 2018년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상에서는 공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집적 가능성과 공항으로부터의 교통연결망을 고려하여 공항경제권의 공간적 범위를 3개 권역으로 구분
 - 영종도 공항도시권: 인천국제공항의 입지로 인한 공항 관련 산업의 집적 권역으로서 공항여객 및 공항화물 관련 산업 기능의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공항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영종~김포 공항회랑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간의 교통연결망을 따라 이동하는 인력·상품·정보를 융합하여 신성장산업 발굴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송도~안산 과학기술·비즈니스권: 수도권 최대의 중소제조업 집적 지역이자 연구개발기관 군집 지역. 항공연구개발 및 항공부품소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실현
- 공항경제권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군집되어 있는 산업생태계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 2018년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은 공항 및 항공 관련 산업을 6개 범위로 분류하여 제시

[표 1] 공항경제권 특별법 발의안 대비 시행안 주요 변화

분야	분류	내용
항공	항공운송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 등 항공기를 이용한 서비스업
	항공제조	완제기, 항공부품소재, 기체의 검사·수리·개조 등 항공기의 제조 산업
	항공연구개발	항공공항, 설계, 시험·엔지니어링 등 항공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공항	공항운영지원	공항터미널 운영, 공항기자재, 정보처리 등 공항 운영에 관련된 산업
	공항인접제조	항공물류 이용 빈도가 높아 공항 인근에 입지하는 경박단소 제조업
	공항지역서비스	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경쟁력으로 하는 소비자서비스업

■ 2018년 공항경제권 구상의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 2018년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상은 연결·혁신·협력에 기반한 공항경제권 산업생태계 구현을 위하여 ① 공항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태계 및 교통망 완결, ② 공항경제권의 산업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③ 공항을 기반으로 한 상생 발전 거버넌스 구축을 전략 목표로 설정
-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 항공정비산업 육성, 항공부품소재산업 성장 기반 구축, 항공여객 대상 관광산업 활성화, 항공금융 기반 구축, 항공수출 지원서비스 확대, 공항운영산업의 신성장동력화, 항공우주산업 발전 기초 조성 등 12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정책과제에 수반하는 39개 세부사업을 제시하였음

2 공항경제권 추진 현황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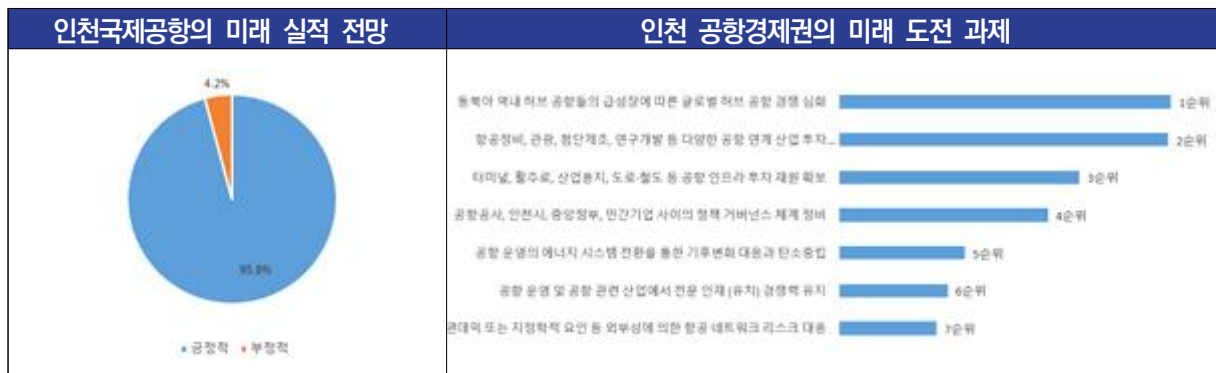
■ 전문가 의견 조사의 개요

- 2018년 수립된 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상은 구속력이 있는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등 지역의 주요 주체들에 의해 채택·변화·발전하였음
- 특히,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존 구상의 유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공항경제권 관련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4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수행
 - 조사기간: 2026년 5월 11~29일 (3주간)
 - 조사방법: 반구조화 질문지를 활용한 구조화된 E-mail 서면 의견 조사
 - 조사대상: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 24명

■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경제권의 발전 전망

- 향후 10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의 실적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의 대다수가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소수의 부정적 의견은 주변 허브 공항과의 경쟁 심화와 항공기 이용에 대한 환경적 우려가 증대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은 성장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인천 공항경제권이 향후 10년 동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동북아 역내 허브 공항들의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허브 공항 경쟁 심화’가 1순위로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항공정비, 관광, 첨단제조, 연구개발 등 다양한 공항 연계 산업 투자 유치·육성’은 2순위 응답이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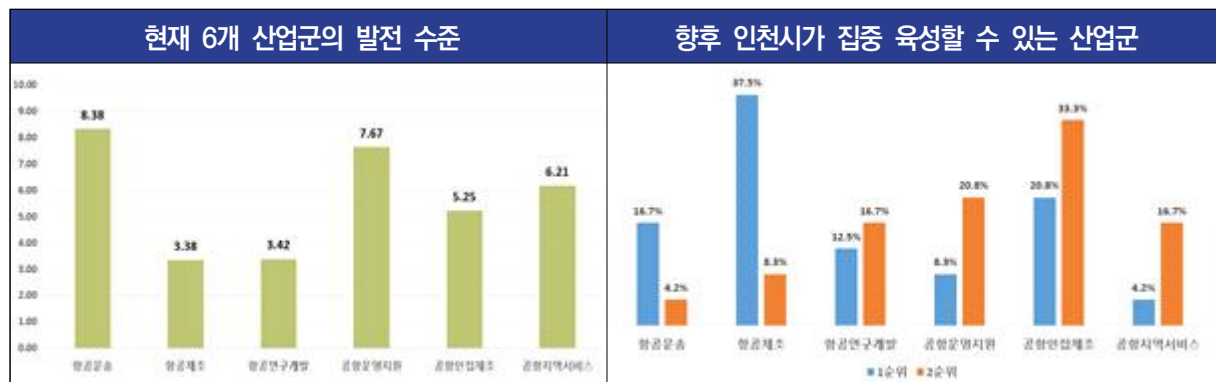
[그림 2]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경제권의 발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공항경제권 6개 산업군의 발전 수준 및 향후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

- 항공운송, 항공제조, 항공연구개발, 공항운영지원, 공항인접제조, 공항지역서비스의 6개 산업군이 현재 인천 지역에서 어느 정도 발전했는가를 10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항공운송 분야 8.38점, 항공운영지원 7.67점, 공항지역서비스 6.21점 순으로 발전도가 높게 평가됨
 - 반면 항공기 및 항공부품을 제조하는 산업과 항공에 관련된 연구개발업의 발전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 향후 인천시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항공제조가 1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공항인접제조가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음
 - 다시 말해서, 의견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인천시가 향후 항공기 및 항공부품을 제조하는 산업이나 항공물류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탄소경박 제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그림 3] 공항경제권 6개 산업군의 발전도 및 유망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재 시점에서 공항경제권 구상 세부 사업들의 유효성

- 2018년 수립된 공항경제권 구상에서는 항공 물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첨단제조·물류 복합단지 조성’,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물류 기술 연구소 설립’, ‘산학협력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세부 사업들이 제안되었음
-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들에게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항공 물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제안되었던 사업들이 여전히 효과적일 것으로 보는가에 대하여 10점 척도로 질의한 결과, ‘첨단제조·물류 복합단지 조성’이 가장 유효성이 높다고 평가됨
 - ‘첨단제조·물류 복합단지 조성’ 8.30점,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7.70점, ‘산학협력형 물류 전문인력 양성’ 6.78점, ‘물류 기술 연구소 설립’ 5.52점
- 2018년 수립된 공항경제권 구상에서 항공정비산업(MRO) 및 항공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정비단지 확대 조성 및 항공정비기업 유치’, ‘항공정비인력양성기관 설립·운영’,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조성’, ‘항공부품소재 전문연구기관 유치’ 등의 세부 사업들이 제안되었음. 이 중 2026년 현재 시점에서 ‘항공정비단지 확대 조성 및 항공정비기업 유치’에 대한 유효도 평가 점수가 가장 높게 측정됨

- 항공정비단지 확대 조성 및 항공정비기업 유치 8.54점, ‘항공정비인력양성기관 설립·운영’ 7.67점,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조성’ 7.13점, ‘항공부품소재 전문연구기관 유치’ 6.7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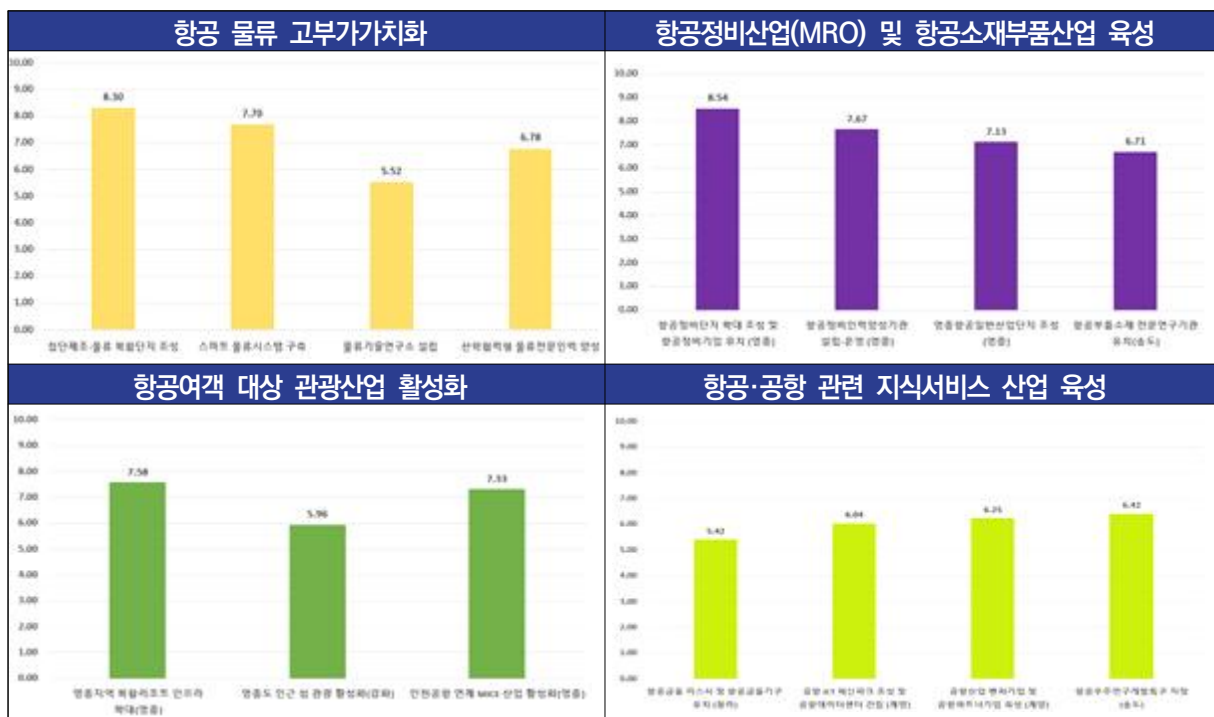
- 항공여객 대상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영종지역 복합리조트 인프라 확대’, ‘영종도 인근 섬 관광 활성화’, ‘인천공항 연계 MICE 산업 활성화’ 등의 사업들이 2018년 공항경제권 구상에서 제안되었음. 이들 관광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들의 현재 유효성에 대해서는 ‘영종지역 복합리조트 인프라 확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음

- ‘영종지역 복합리조트 인프라 확대’ 7.58점, ‘인천공항 연계 MICE 산업 활성화’ 7.33점, ‘영종도 인근 섬 관광 활성화’ 5.96점

- 항공·공항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는 2018년 공항경제권 구상에서 ‘항공금융 리스사 및 항공금융기구 유치’, ‘공항 ICT 혁신파크 조성 및 공항데이터센터 건립’, ‘공항산업 벤처기업 및 공항파트너기업 육성’, ‘항공우주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의 사업이 제안되었음. 이 중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효성이 높은 것은 ‘항공우주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평가됨

- ‘항공우주연구개발특구 지정’ 6.42점, ‘공항산업 벤처기업 및 공항파트너기업 육성’ 6.25점, ‘공항 ICT 혁신파크 조성 및 공항데이터센터 건립’ 6.04점, ‘항공금융 리스사 및 항공금융기구 유치’ 5.42점

[그림 4]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 세부 사업의 현재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중앙정부 및 타지역 공항경제권 추진 정책 동향

■ 정부,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예정('27.05.13)

- 2026년 4월 23일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으며, 공항과 지역을 연계하여 특화된 공항경제권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정 절차) 시·도지사가 지정을 요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이 가능함
 - 지정 요건은 ① 기본계획 부합 ② 공항과의 연계성 및 접근성을 통한 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가능한 지역 ③ 공항경제권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 ④ 자금조달계획 실현 가능 ⑤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을 갖춘 지역에 한하여 지정함
 - (지정 효과) 국가·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도로·철도·용수 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도 지원할 수 있으며, 공항운영자의 협력 의무를 명시함
 - (의의) 해당 법안은 공항경제권에 대한 지원과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개별 사업단위로 분산되어 있던 공항 주변 개발을 단일 기본계획을 통해 묶어 추진할 수 있음
 - 공항경제권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며, ① 항공산업과 연계한 공항경제권의 발전 전략, ② 입주기업의 지원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③ 적합업종의 선정 및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 등 공항과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을 담도록 규정함
- 법안 시행으로 공항경제권의 제도적 근거(지정·계획)는 마련했으나, 개발사업은 개별 사업법에 따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항경제권으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개발·성과 창출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발의안에서는 공항경제권위원회 신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토지 수용권, 조세·부담금 감면, 개발이익 기금 활용 등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시행안에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공항경제권 지정·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적 근거로 축소됨
 - 특히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 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됨

[표 2] 공항경제권 특별법 발의안 대비 시행안 주요 변화

	발의안(의안번호: 2200233, 2024.6.10. 발의)	시행안(법률 제21631호, 2026.5.12. 공포)
조문 수	53개조	19개조
법적 성격	공항경제권 개발사업 추진 근거	공항경제권 지정·계획 수립 근거
추진기구	(신설)공항경제권위원회·지원단	(기존)항공정책위원회
사업시행자	공공 및 민간투자자 참여 가능	제외
인허가	28개 법률 인허가 의제·일괄협의회	제외(개별 사업법에 따름)
토지확보	토지수용·사용권 등	제외
재정·세제	조세·부담금 감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제외(사업비 지원은 임의규정화)
재투자	개발이익 기금 조성, 재투자 가능	제외
개발방식	직접 개발 가능 (사업구역 지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준공)	개별 사업법 근거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중심 공항복합도시 조성 및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

- 부산광역 시도 가덕도신공항 개항 효과를 도시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삼기 위해 2022년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하여 공항과 배후도시를 일체로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함
 - 가덕도신공항(부산 강서구, 2035년 개항 목표)은 현재 부지조성공사 추진 단계임
- 핵심 방향은 신공항·부산신항 등 기존 물류 인프라와 연계하고, 배후 부지에 주거·산업·관광 기능이 결합된 복합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것임
 - 부산·경남은 가덕도신공항을 남부권 성장동력으로 삼아, 공항·항만·철도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경제권을 공동으로 지향하고 있으며, 부산은 공항이 입지하고 있는 만큼 직접 조성, 경남은 공항 인접 시·군을 배후도시로 개발하고 있음

[표 3]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 개발계획(안)

	지구 성격	주요 도입시설	면적
1구역(복합)	신공항 배후지원도시 기능	주거, 관광, 상업·업무, 물류 등	약 774만㎡
2구역(신산업)	신재생에너지 거점 단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연구시설 등	약 56만㎡
3구역(관광·휴양)	관광·휴양·위락 거점 단지	해양리조트·호텔, 복합문화공간 등	약 165만㎡

자료 :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2026년 주요업무계획

- (추진 주체) 부산광역시의 공항복합도시 추진체계는 공항건설(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토교통부) - 배후도시 조성(신공항추진본부, 부산광역시) - 연계·협력(다기관 거버넌스)으로 역할을 분담·결합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¹⁾

1)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 2026년 주요업무계획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공항의 설계·시공·운영을 담당함
- (신공항추진본부) 지자체 차원의 컨트롤 타워로 3과 9팀·현원 50명 규모이며, 기본구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협의 등 계획 수립과 행정 조율을 총괄함
- (다기관 거버넌스) 정부 부처와 공공·연구기관 등 42개 기관이 참여하여 5개 분과(건설·운영/교통망/항공수요/물류/배후지역 개발)로 운영
 - ‘가덕도 신공항 성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24.12,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근거로 2025년 2월에 출범함
 - 다만, 다기관으로 구성되어 기관 간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 운영 고도화 용역이 진행 중²⁾
- (추진 경과) 가덕도 신공항을 남부권 물류·경제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법·제도 정비와 구역 지정 등 후속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글로벌 허브도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24.5. 발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 통과(26.3.)
 - (공항복합도시 경제자유구역) 가덕도신공항 공항복합도시 조성구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23.5.~26.4.)
 - (운영 참여 검토) 가덕도신공항 중장기 발전전략·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공항 운영 참여 모델을 사전에 검토함
 - ‘가덕도신공항 운영 참여 방안 및 남부권 관문공항 발전방향 도출 용역’(24.4.~25.5.)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 참여 모델 설계, 운영 참여 관련 법제 개선 및 거버넌스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과 신항 연계 물류 배후도시로 조성 추진

-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2022년 개발구상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정립함
 -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2023.5.16. 공포, 법률 제19413호)을 통해 주변개발예정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배후도시 개발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보강됨
 - 개정안을 통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인 10km에 벗어나더라도, 어업권·양식업권 등 직접적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의 핵심 전략은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부산신항에 배후 철도망을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 중심 경제권’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허브 중심지로 도약
 - 진해신항(창원시 진해구, 2032년까지 1단계로 9선석을 개장하고, 2·3단계를 거쳐 2040년까지 21선석을 단계적 개장)³⁾

2) 염창현(2026/05/03). 정부,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고도화 방안 찾는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60503.99099000209>

- 신공항 개항을 통해, 기존 제조업을 첨단제조·지식서비스·금융비즈니스와 연계하여 물류·제조 융합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지향함

[표 4] 경남도 지역별 발전 방향

지역	주요 내용
창원시	배후 물류거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첨단소재·부품제조업 육성
김해시	스마트 물류 플랫폼(내륙 물류), 전자상거래, 콜드체인 등 부가가치 물류 확대 기반 조성
거제시	해양 레저·휴양·MICE 산업 거점도시이자 조선 디지털 생산·해양이동수단 산업 집적지

자료 : 이미지(2023/12/20)

- (추진 경과)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병행하고 있음
 - (물류 특화) 물류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2026.4.7. 공포, 2027.4.8. 시행 예정)에 따라, 김해시의 역점사업인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동력을 확보함⁴⁾
 - (거제 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거제시는 2026년 3월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함⁵⁾
 -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98.7%에 달해 가용지가 부족한 가운데, 향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진해신항 건설 등에 따른 배후부지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⁶⁾

[그림 5] 경남도의 공항경제권 추진 방향



출처 : 경남연구원·유신(2023.03.06.),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 구상 중간보고자료; 배은송·조아영(2024), 경상남도 공항경제권과 MICE 활성화 전략. 경남연구원.

3) 이정훈(2025/12/28). 100% 경남 땅·바다에 건설하는 '진해신항' 새 성장엔진 기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60400052>

4) 이준영(2026/03/16). 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환경...동북아 플랫폼 추진 기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6096900052>

5) 민영규(2026/03/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범위 확대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3058200051>

6) 김은아(2026/04/08). 거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가덕도신공항 시대'글로벌 물류·관광 거점' 도약. 거제신문.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95>

4

정책적 시사점

■ 공항경제권 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7년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인천시는 특별법의 제정·시행 이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함.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제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공항경제권 사업계획’을 작성·제출하여 공항경제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
- 공항경제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공항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이외에도 기반시설의 확보, 재원 조달의 현실성,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같은 중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비가 필요함. 이러한 요건들은 단기간의 준비로 충족할 수 없기에 인천시는 공항경제권 지정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함
- 의견 조사에 참여한 24명의 전문가 중 22명이 기존의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기존 공항경제권 구상은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판단되며, 인천시는 새로운 공항경제권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공항경제권 전략의 재정비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공항경제권이 상징적인 구상에서 체계적인 발전전략으로 진전되지 못한 이유는 공항 지역과 연관된 공간을 행정적 관할권·소유권에 따라 구분하고 소관 기관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임. 공항경제권 거버넌스의 필요성은 2018년 구상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기구 설립에 이르지 못함
- 부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항경제권 전략이 지역 내에서 정책과 사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이고 구속력 있는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 부산시의 신공항추진본부와 같은 총괄 컨트롤 타워 기능과 다기관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 조율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음
- 현재 인천 지역에는 인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인천공항 상생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가 민간부문 거버넌스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행정기관들의 의사결정을 조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향후 공항경제권 특별법의 시행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발 추진 방향 및 전략 수립, 실행 체계에 대한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방향의 논의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특화 산업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천만의 공항경제권 차별화 필요

- 2018년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은 공항을 중심으로 인천에서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들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특화된 산업 분야를 도출하여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음
- 시행 예정인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는 시·도지사가 공항경제권의 적합 업종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각 지역의 공항경제권이 차별화된 특화 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됨
-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글로벌 허브 공항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항공정비산업(MRO) 육성이나 인천의 축적된 제조업 역량을 활용하여 항공소재부품산업 육성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판단됨. 또한 국내 다른 공항들이 갖지 못하는 항공여객 규모의 강점을 살린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투자도 지속되어야 함

■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공항경제권의 제도적 적응력 확보

- 2018년 공항경제권 구상 수립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탄소중립·ESG 경영 의무화, UAM 도입 실증 준비,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였음. 공항경제권 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I)이 가속화되고, UAM-버티포트를 중심으로 한 미래 모빌리티 네트워크가 빠르게 실현될 가능성이 큼
- 인천의 공항경제권은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해야 하며, 이외에도 예측하지 못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로 진화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남의 사례와 같이 공항경제권과 다른 특구 제도를 긴밀하게 연계시키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도 전환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문헌

[보고서]

배은송·조아영(2024). 경상남도 공항경제권과 MICE 활성화 전략. 경남연구원
윤석진 외(2018). 인천광역시 공항경제권 구상. 인천연구원

[자료]

경남연구원·유신(2026/03/06). 트라이포트 배후도시 개발 구상. 중간보고자료.
국토교통부(2017). 공항경제권 육성 기본계획 작성 지침
부산광역시 신공항추진본부(2026). 2026년 주요업무계획.

[신문기사]

김은아(2026/04/08). 거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가덕도신공항 시대'글로벌 물류·관광 거점' 도약. 거제신문.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895>
민영규(2026/03/2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범위 확대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3058200051>
염창현(2026/05/03). 정부,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고도화 방안 찾는다. 국제신문.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60503.99099000209>
이미지(2023/12/20). 경남 '트라이포트 신경제권' 구축해 수도권 대응 구체화. 경남도민일보.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42128>
이정훈(2025/12/28). 100% 경남 땅·바다에 건설하는 '진해신항' 새 성장엔진 기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60400052>
이준영(2026/03/16). 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법 환경...동북아 플랫폼 추진 기반".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6096900052>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인** 최계운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www.ii.re.kr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이슈브리프를 무단전재 또는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 본 이슈브리프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